고용노동부 보도설명(정정)자료

보도시점 2025. 4. 21.(월) 배포 즉시

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,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입니다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4.21.(월) 한국경제, 임금체불한 사업주 “정부에 청구해 받아라” 기사 관련

2. 설명(정정) 내용

□ 정부는 **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** 및 **사업주 자체청산 유도**를 위해 노력*하고 있으며,

*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('24.10, 근로기준법 개정), 강제수사 활성화 등

○ 변제금 **미납 사업주 신용제재** 도입('24.8, 임금채권보장법 개정), **부정수급 기획조사** 확대('24.7.) 등 **변제금 회수 강화** 및 **기금재정 건전성 확보**를 위한 **다양한 제도개선***을 추진해오고 있음

*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, 장기미회수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

□ 또한, **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** 및 **상한액 인상 추진은 전혀 사실과 다름**

○ 최근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관련 **국회 법안 발의** 및 **대지급금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**하여, 그 **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**하기 위해 **정책연구를 발주**한 것으로, **상한액 인상 등은 검토한 바 없음**

□ 앞으로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**체불 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**하되, 임금채권보장기금의 **재정건전성 확보**를 위한 **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**임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김부경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권유리 (044-202-707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